

경제 규제혁신 TF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2.10)

- 지금부터 금년 첫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수출, 투자 감소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, 고금리·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*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.

* 제조업 BSI(전망): ('22.10) 75 → ('22.11) 73 → ('22.12) 69 → ('23.1) 68 → ('23.2) 65(△3)

- 조속한 경기반등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 재정기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,
 -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

[외환제도 개편 방향]

- 그 일환으로 오늘은 먼저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❶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번 '외환제도 개편'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,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 -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,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습니다.
 - ❶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, 거래 前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.
 - ❷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대폭 간소화하고,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시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겠습니다.

③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,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對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,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외환제도의 틀을 바꾸는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

- 관련기관 업계·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「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」를 통해 논의하고,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.

□ 한편, 지난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‘외국자본의 놀이터’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,

○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[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]

□ 다음으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입니다.

□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, 중소기업 판로개척, 수요기관의 구매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왔으나,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,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, 조달현장 활력 제고, 시간·비용·서류 부담 완화, 조달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4개 분야에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몇 가지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면,

① 먼저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*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여 1,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.

* 종합쇼핑몰 등록시 수요기관-조달기업간 별도 계약체결 없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처럼 간편하게 주문 가능 → 제품 판로 개선에 크게 기여

- ② 소방·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(예: 소방용 로봇)를 적극 발굴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**하고, 다수 특허권자**로 구성된 신기술제품(예: 자율주행차)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* 가격경쟁에 따라 혁신적 안전장비 현장 조달 애로 → 혁신제품 지정으로 수의계약 가능

** (現) 다수 특허권자 구성 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 제한

→ (改) 공동수급체(분담이행방식)를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

- ③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을 개선*하여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**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* (現) 계약단가 인상시 既 주문 물량은 인상 전 단가 적용

→ (改) 既 주문된 미납제품에도 인상된 단가를 적용

** (現) 계약기간 중 2회 → (改) 계약당사자간 협의시 자유로이 설정(횟수 제한 無)

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조달청장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.

[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]

☐ 다음으로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입니다.

☐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,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,

- 정부는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, 중복·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.

- ① 모듈러*, Machine Control·Machine Guidance**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·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, 건설현장에 빠르게 적용·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동일 혹은 유사 패턴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先제작·운송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

** (Machine Control)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제어 (Machine Guidance)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

- ② 건설공사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(국토부)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(고용부)간 중복사항을 해소하고, 별점경감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*하겠습니다.

* 현재는 별점이 있는 업체만 우수 안전관리에 따른 별점경감 혜택이 가능

☐ 그럼 지금부터 조달청장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.
(조달청장 모두발언)

☐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